



# 더 정의로운 세계로 가는 길

제21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 제출된  
프랑스 사회주의당의 제안문  
(일명 "조스팽 제안문")

번역 : 박정현 브레반대 박사과정

이른바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에게 열려 있는 유일한 길인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토니 블레어가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현대화"에 공감하고 있는가? 이른바 "좌파 공급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현실정책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가? 지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제21차 대회는 이런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회는 토니 블레어 영국 노동당 대표가 주도하는 이른바 "현대화론자"들과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사회주의당 대표가 주도하는 이른바 전통주의자"들 사이의 일전으로 치러졌다. 여기서 현대화론자들은 "제3의 길"이라는 개념을 공동성명 속에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이 대회에 제출된 프랑스 사회주의당의 제안문 (일명 "조스팽 제안문")은 이른바 "제3의 길"과는 뚜렷하게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원문) Vers un Monde Plus Juste (Contribution du Parti Socialiste Français au Congrès International Socialiste),

〈출처〉 <http://www.parti-socialiste.fr/html/international/intern/orient/5.html>

“전통에 충실하다는 것은 그것을 불꽃으로 살린다는 말이지 꺼진 재를 간직한다는 말이 아니다.” - 장 죠레스

오늘날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문해보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리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역사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기본조건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면서도 역사의 변화에 조응해왔다.

세계 도처에서 우리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신을 민주주의 및 사회진보의 일치시켜 왔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서 투쟁해왔으며, 투쟁의 정치·사회적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조직하고 순회시켜 그것이 자신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도록 만드는데 기여해왔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일체의 불평등을 축소시켜주는 복지사회체제를 창출하였다. 우리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를 단호하게 탄핵해왔다. 그것의 오도된 논리는 사회주의의 이상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인간중심주의에 반하는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감동적인 역사 속에서 탄생한 사회주의 정당들은 “전체 인민의 정당”으로 되었으며, 보편적 이해의 수호자로 되었다. 우리는 각국의 현실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서도 국제주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양차 세계대전과

식민지 해방운동 이후에는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3세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규범 및 국제제도를 창출하는 일에 집중하는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이 이룩한 업적들이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비록 선진산업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생했지만 지금은 전세계로 확산되어 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각국 인민의 희망을 체현하고 있는 정당, 운동단체, 그리고 사회조직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이 희망에 값해야만 한다.

## 미래에 대한 성공적 대처

### 근본가치의 재확인

우리를 결속시켜주는 동력은 무엇보다 우리가 수호하는 가치들에 근거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의 세 가지 근본가치, 즉 “자유 평등 동류애”는 1989년 스토훌름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선언문에 채택되었다. 이 가치들은 항상 우리 현실정치의 근저에 깔려 있다. 자유, 이것 없이는 민주주의도 개인의 완전한 자기실현도 있을 수 없다. 평등, 이것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동류애(또는 노동운동의 전통 속에서 본다면 연대와 협력), 이것은 사회를 개인들의 단

순한 운집 이상으로 만들어주며,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가치들이 상호 긴장관계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가치들을 상호 중재하고, 이 가치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우리의 역량으로부터 우리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환경보호, 남녀평등, 문화 다원주의 등 새로운 목표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필연성으로부터 우리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근본가치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현실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근본가치와 현실정치 조건 사이에서 우리는 더 정의롭고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게 재확인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비판적 관계를 전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시장경제가, 비록 부의 생산에 있어서는 바탕 바 없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흔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

장경제는 “어디로 전진하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전진하는 힘이다.”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드세한 지난 20년 사이에 일어난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국제적 불평등과 국내적 불평등이 동시에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무수한 인간적 희생을 동반하는 경제위기는 거듭 반복되고 있으며, 그 고통은 실업과 소외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는 유럽에서 어려운 경제위기들을 체험하였으며, 또 지금도 여전히 체험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그리고 러시아로 위기가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야만 했다.

### 자랑스러운 유산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 몰락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훨씬 전에 이미 계획경제의 발전불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비판하였다. 우리는 경기정책, 사회보장체계, 교육 및 직업훈련, 소득정책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같은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우리는 1950~60년대에 사회민주주의가 달성한 업적을 회화화시키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반박해야만 한다. 사회민주주의가 전적으로 국가기구의 행위에만 의존하였고, 국가예산만 전반적으로 증대시켰다는 평가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은 오히려 사회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과

협상을 통하여 사회의 주요 행위 주체들, 즉 정부, 기업, 노동조합을 조정한 데에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공공영역에 어느 정도 큰 역할을 부여한 것도 법률과 협상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사회민주주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권과 다수를 위한 경제의 민주적 관리를 조화시켰고, 이를 통하여 완전고용, 경제성장, 그리고 엄청난 사회진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만인을 위한 현대성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늘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현대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 현대성이나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현대성이란 우

리의 정체성, 즉 우리의 근본가치에 대한 신봉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현대성이란 항상 사회진보의 담지자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성이란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어야지, 뇌보를 번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제어된 현대성을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성이란 이른바 자연법칙과 같은 경제력에 우리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성이란 공동체적 구성의 결



프랑스 사회당은 현대성을 추구한다. 사진은 프랑스 사회당 홈페이지 사진

과물이며, 인민주권이 민주주의 방식을 통하여 표현된 산물이다. 이와 같은 현대성을 구성하기 위하여 세계는 규율, 즉 당대의 조건에 합당한 제어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포괄적인 현대성을 원한다. 현대성이란 경제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사회·문화적 영역을 포괄한다. 끝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유된 현대성을 원한다. 현대성이란 만인의 공유물이어야 하며,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

현대적이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

현재 우리의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맥락은 펠리페 콘찰레스에 의해 발기된 “세계진보” 위원회의 보고서에 매우 잘 분석되어 있다. 비록 “지구화”라는 개념이 맥락의 변화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한 가지 개념으로 현재의 시대맥락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세계는 시장을 통하여 단일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을 꼽아 본다면 다음과 같다 -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국제교역의 증대, 금융거래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발달,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급성장, 인구대국들(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의 국제경제권 진입, 소련의 붕괴와 혁명 이데올로기의 몰락, 미국의 해제모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심층적인 변화는 우리를 지구화된 동시에 파편화된 세계로 끌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전통적인 연대를 파열시키는 새로운 생 산구조 및 고용구조를 발달시키고 있다. 이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창궐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이 변화는 개별국가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으

며, 그들의 선택 폭을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요컨대 이 변화는 정치행위에 걸어 볼 수 있는 희망을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절양식들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장과 국가기구에 부여되는 권한이 결정되어야 하고, 개인과 사회의 역할이 결정되어야 하며, 개별 국가, 권역별 그룹, 그리고 국제조직의 권한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선대 사회주의자들이 발휘한 것에 머금기는 의지와 분별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보다 더 수월한 세계에 처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가치와 실천은 분리될 수 없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대두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진정한 권리, 진정한 시민권을 보장받을 때에만 그 위험들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는 변함 없이 사회정의라는 이상을 통하여 자신을 정의하여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능력 및 적극성의 발현을 힘껏 지원하고, 시장의 결합에 대처하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안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회구성원들, 부자와 강자뿐만 아니라 빈자와 약자에게도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일이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시민권에 대한 이해에 근

우리는 현대성이란 항상 사회진보의 담지자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성이란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어야지, 퇴보를 변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제어된 현대성을 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거하고 있으며, 시민권은 현실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각인이 사회적 삶에서 자신의 몫을 차지하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의 능력을 부여해 주고자 한다. 시대의 급박한 요구들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 우리가 변함없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삶에 대한 참가권이다.

### 시민권의 필수성

국가기구와 시장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자 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즉, 사회주의는 개인의 발전을 보장하는 집단적 주권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적 사회주의는 명백히 시민권에 대한 이론이어야만 한다. 국민들은 사회의 중요한 변화들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특히 개인들의 행동에 따르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은 국민인 동시에 시장의 행위자이다. 국가기구와 시장은 둘 다 정당성을 가진, 그러나 성격이 서로 다른

장치이다. 이때 우리는 민주주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강화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란 국민들에게 정치행위를 통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평등한 참가를 전제로 한다.

일반교육, 직업교육, 각종 시민권, 각종 제도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시민권 가운데 특히, 사회권이 필수불가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권은 생활보장과 기회균등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써 만인이 실질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정치공동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의 근본 가치를 따르는 행위,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서로 분리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시민권이라는 기준을 행위의 척도로 삼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없다면 사회주의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할 지가 불분명하게 된다.

## 더 인간적인 사회

“시장경제에 찬성한다. 그러나 시장사회에는 반대한다.” 리오넬 죠스팽의 이 공식은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공식은, 비록 시장이 독자적인 실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이 시장에서의 삶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삶에 참가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참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건 교육 문화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여 분배될 수 없는 재화들이며, 또 그래서도 안되는 재화들이다. 이 윤리구단이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는 사회는 인간적 사회가 아니다. 모든 재화가 상품으로 되는 사회는 인간적인 사회가 아니다. 인간적인 사회란 모든 종류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 시장의 억제

인간의 노동과 인간정신의 창조물들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될 수 없다. 인간의 육체는 상품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생태윤리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염려스러운 문제들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간의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만약 국민보건사업 지출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은 사회보장체계의 존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럴 뿐이며, 인간의 건강을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사회보장체계를 사영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기 위해서 그럴 뿐이다. 또한 인간의 건강은 자유무역의 회생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료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만국 인민의 권리라는 정당한 것이다. 우리의 자연환경도 결코 상품이 아니다. 자연환경은 미래 세대들에 대한 배려 없이 마구 폐내어 쓸 수 있는 원료창고가 아니다. 오로지 지속 가능한 성장만이 진정한 성장이다. 우리는 부의 생산과 생산주의를 혼동하지 않는다. 생산력, 사회발전, 그리고 환경보전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더 인간적인 사회란 공공부문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사회 및 영토의 통일성을 보장해주고, 장기적 투자를 요하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사회다. 공공부문을 국가가 소유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탈규제화를 통하여 사영경제를 개입시키는가 하는 형식은 나라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부문의 과제는 엄연히 존속되어야만 한다.

### 완전고용의 재달성

더 인간적인 사회란 무엇보다도 완전고용의 달성을 또는 재달성을 조직하는 사회이다. 사회민주주의 정치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노력과 자신을 일치시키야만 한다. 실업은 빙곤의 최대 근원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



프랑스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주도하는 '제3의 길'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사진은 영국의회와 토니 블레어

은 무엇보다도 완전고용을 달성 또는 재달성하고, 기술변혁 때문에 생겨난 고급노동과 저급노동 사이의 점증하는 괴리를 메우는 일이다.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잘못된 대안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서는 안된다.

미시경제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서로 대립시키지 말자. 마치 엄청난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하는 것만이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법인 양 행동하지 말자.

우리에게 주체적 행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컨대 거시경제정책, 생산요소들 사이의 사회적 분담금 제조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창출사업, 직업교육, 노동시간 단축,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통하여 행위할 수 있다. 정책의 선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건 그것이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사회적 안전을 진작시킨다.

고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대폭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국가기구는, 특히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기구는 -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 - 예컨대 양질의 공공서비스, 국민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수준, 연구개발 잠재력, 적절한 사회간접자본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고용집중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저급직능 노동을 지원해야 한다. 이 일은 국가기구가 직접적으로 공공서비스 부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사영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후원하는 식으로 이루

어질 수도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 또는 재진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직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과 장기실업자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특히 우리 사회의 재분배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축해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지원할 가치가 있는 발전주제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경제성장의 고용효과를 강화시켜주며, 노동자들에게는 직능향상교육, 가족봉사, 개인적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자유시간을 제공해준다. 어떤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가 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상이한 현실, 상이한 노동시장 및 노동관계체계에 달려 있다. 우리가 현재 프랑스에서 실현 중에 있는 주35시간 노동제의 도입을 예로 든다면, 우리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적 대화를 추동하였다.

기술의 발전 및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히 조응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노력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지만 노력의 내용은 구별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전반적 불안전을 초래하는 식의 “유연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을 한다는 것은 삶의 예측불가능성에 대응하여 일종의 안전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추가적인 예측불가능성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규범

화된 단체협약이라는 업적을 수호해야만 한다. 규범화된 단체협약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인 변화에 효과 있게 대응하도록 만들어주고 - 왜냐하면 대등한 타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은 진보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여성노동에 대해서는 각별하고도 지속적인 관심이 기울여져야만 한다. 세계의 도처에서 여성노동은 가족수입의 보조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민경제 안에서 여성노동이 빈부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차원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곳도 허다하다. 그리고 선진국들에서는 여전히 동일노동에 대하여 현격한 보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에서 남녀 기회균등을, 그리고 법적 지위와 보수에서 남녀 평등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 사회적 안전보장

“사회보장국가”, “복지사회” 등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논의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 안전보장이다. 인구의 고령화,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대량실업, 사회적 소외,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의료체계 등 사회보장의 난제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사회보장은 국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경제에 그 대가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연대적 사회의

사회민주주의 정치는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노력과 자신을 일치시켜야만 한다. 실업은 빈곤의 최대 근원이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은 무엇보다도 완전고용을 달성 또는 재달성하고, 기술변혁 때문에 생겨난 고급노동과 저급노동 사이의 점증하는 괴리를 메우는 일이다.

실현이라는 기회는 여전히 현안성을 잊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의 담당자로서 국가기구는 우선 질병, 장년퇴직,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닥칠 수 있는 전통적인 위험들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제도, 노동과정, 생애주기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도 보전해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이같은 새로운 과제들에 대처할 수 있으며, 또 대처해야만 한다. 사회보장의 근본취지를 문제로 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투자”, 특히 개인들로 하여금 최선의 조건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회적 투자”와 “사회보장비 지출”이 양자택일식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수많은 구체적 정책들은 단순히 이 쪽 또는 저 쪽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급직능 노동을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투자인 동시에 일종의 재분배 행위이다. 사회

적 투자가 국가기구의 수많은 전통적 사회보장 임무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한가지만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회적 투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재분배정책에 돈을 아껴서는 안되며, 또 아낄 수도 없다.

또한 우리는 사회보장 급부의 보편성과 선별성을 양자택일 식으로 다루어서도 안된다. 때로 급부의 선별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험에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몇몇 사회보장 급부는 기여에 대한 급부 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안전보장의 효과를 최대로 키우는 길은 최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컨대 의료와 연금 등 기본적 재화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지원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도 수혜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혜자들 및 기타 사회적 안전보장에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사회계약을 통하여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은 선별적 급부

에 따르는 사회적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급부의 보편성은 사회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이며, 사회의 여러 계층들을 소외시키는 “빈곤의 합정”을 퇴치할 수 있는 방편이다. 사회부조, 동기유발, 책임 사이에 올바른 균형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노동촉진 복지(welfare to work)”가 “유일한”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지 말자. 특히 사회적 소외에 자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치안, 직업교육, 사회부조, 일자리가 총체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무엇보다도 광범위한 공적 및 사적 투자가 요구된다.

### 새로운 동맹의 결성

“복지사회”는 정치적 기획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기획으로 서술되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는 선명하게 구분되는 여러 사회계층들로 나뉘어져 있다. 중류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심장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 계층은 국민경제가 팽창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지속된 대량실업으로 “소외자” 집단들이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은 그동안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소외자 계층, 저소득 계층, 그리고 중류층의 이해와 노력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이들 계층들은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관심사들을 가지고 있

다. 노동의 발전, 불안정 고용의 극복, 교육체제의 개선, 사회안전망의 공고화 등이 그것들이다.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견주어 볼 때 중류층은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모델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중류층의 관심사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류층에게 우리의 가치관을 설득하여 이 계층을 원쪽으로 견인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정의로운 재분배정책에 필요한 다수세력을 창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같은 “새로운 동맹”을 체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며, 이 일은 우리의 정치적 기획과도 일치되는 일이다.

### 현대적 국가기구 제고

재분배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는 부의 창출을 고무하고, 보험적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공동규범의 최종 보증자로서 국가기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어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현대적 국가기구는 변화를 선취하는 국가기구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유한 수단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미래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대적 국가기구는 필요한 추동력을 제공하는 국가기구이다. 국가기구는 시민, 사회단체, 노동조합, 기업, 자치단체 등 사회적 행위자들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면서



프랑스 사회당 정부를 이끌고 있는 리모네 조스탕 수상.  
그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에서 전통주의자를 대표한다.

도, 그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현대적 국가기구는 시장 경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기구는 각각의 행위주체가 전체사회에 서 차지하는 자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이 책임을 수행한다. 기술혁신의 성과가 전체사회에 신속하게 과급되도록 추동력을 주는 일, 바로 이 일을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두 가지 문제는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오늘날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가? 둘째,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자본의 소유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이 분담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케인즈주의”는 어

제의 세계에는 적절했지만 “복잡한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허황한 주장이 그동안 달아 빠지도록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첫째, 케인즈주의 교훈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는 전반적인 불확실성 속에 빠져 있으며, 세계시장은 광범위하게 탈규제화 되었다. 이런 세계에서는 저축이 반드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완전고용도 더 이상 목표로 추구될 수 없다. 둘째, 무엇보다도 사회민주주의의 근본논리는 1950~60년대에 실시된 케인즈주의적 제어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성공은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노동자 및 사용자의 이해대변 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한 것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이같은 조정은 일국 차원에서 보더라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고, 또한 유럽 차원에서도 요청되고 있다. 유럽에는 성공적인 거시경제적 예산정책 및 화폐정책을 실시할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 우리는 유럽 각국 정부,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이해단체들을 조정하고 이들 사이에 신뢰의 분위기를 창출함으로써 그에 필요한 수단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유럽 경제정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세를 도입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조세정책을 서로 조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장기성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 이 일에 국가기구는 자신의 몫을 다 해야 한다. 또한 기업도 여기에 책임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발전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사실은 의사결정형식의 획일성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영이 갈수록 단기적 자본주의 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기금의 비대해진 영향력이 그 한 가지 증거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전망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노동자들 및 전체 사회의 이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금융구조 및 조직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결정 기준들이 요청된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대표가 어떤 형식으로 의사결정의 핵심과정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형식은 지금까지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룩한 성과들 및 분석들을 토대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는 반드시 노동자들이 참가해야 한다. 이 원칙은 우리의 공동미래를 구상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 세계를 위한 규범

사회민주주의는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조절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오늘날 결정적인 문제들은 전지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러므로 그에 대한 해답도 전지구적 차원에서 구해야만 한다. 전지구적 문제들에 전지구적 해결책!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점점 더 전지구화 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전지구적 규범을 필요로 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역사, 문화, 정치와 관련하여 주로 일국 규모로 사유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이 같은 편협한 사유방식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이 말은 평화문제는 물론이고, 경제관계 및 불균등발전, 생태계의 거시적 평형, 정보통신의 전지구화, 그리고 국제적 마약거래와 무관하지 않은 주거지의 치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역들에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는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조절이 부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한다. 세계의 균형잡힌 발전이 실패할 경우 전통적 가치들이 공격적인 형식으로 재등장할 수 있다. 널리 보급되어 있는 무기들을 매개로 인종주의에 근거한 일국주의 또는 종교적 맹신주의가 발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진보가 실얼음을 디디고 있으며 쉽게 도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경험해왔다.

## 국제법규의 제고와 그 유효성 확보

냉전이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수단들이 불충분 또는 부적절하다는 사실

국가기구는 시민, 사회단체, 노동조합, 기업, 자치단체 등 사회적 행위자들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그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연합(UN)의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안전보장, 중재,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국제체제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업적은 이중적이며, 그것의 권한부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국제연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른 어떤 국제 조직도 국제연합을 축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국제적 일방주의가 시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가들로부터 존중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최근의 위기들, 특히 옛 유고슬라비아와 티모르의 위기는 어떤 형식으로든 "인본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한번, 이 위기들은 이런 개입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연합 현장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독재자들이 국민들의 권리를 공공연하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예방적 외교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이 현장 제7조에 따라 상설군대를 보유해야만 한

다. 또한 국제연합은 군비축소와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를 논의할 수 있는 중심 광장으로 되어야 한다. 이때 국제연합은 경우에 따라 이 권한을 권역조직들에게 할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3세계 개발, 환경, 건강, 교육, 그리고 문화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연합 산하조직들에게도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제연합의 기구들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 사회의 구성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빌리 브란트가 제안했듯이 세계의 각 권역이 안전보장이 사회에 대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상임 이사국을 선출하는 일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범자, 반인류적 범죄자, 양민학살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 재판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최근에 설립된 국제 형사재판소와 같은 특수 재판소들의 설립의 국제윤리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고, 인간의 권리가 전세계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로 될 것이다.

#### 국제 금융체제의 개혁

우리는 전세계 차원에 유효한 조절장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 의지는 우리 편안에서도 왕왕 표출되고 있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대변자들이 가진 회의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발전과정이며, 수많은 나라들에게 발전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는 규범을 필요로 한다. 이 규범은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권역별 및 일국별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전체 동남아시아를 훑은 뒤 러시아를 거쳐 라틴 아메리카로까지 번진 금융위기는 1997~98년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또한 선진국의 몇몇 투자기금들이 투기와 과산은 전체 은행체제를 붕괴시킬 위협까지 안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위기들은 법치국가 구조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미결된 곳에서 발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들은 절대적 자유화정책의 실패를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현재 시급히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 금융체제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투기적 투자금융과 금융기관 해외지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에 사전예방규정들이 부과되어야 한다. 조세천국들을 없애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에 유입되는 자본의 자유로운 물결을 제한하여 경제안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들의 자본시장은 점진적으로 규칙에 따라 개방되어야 한다. 투기적 자본이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본의 국제적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위기를 처리할 때에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채권자들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국제적 조직범죄, 국제 마약거래 및 돈세탁에 맞서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연합 산하에 경제안전보장이사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마지막 안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제위기와 금융붕괴 등 경제현상 및 금융현상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들은 안전보장이사회 설립근거가 되었던 군사적 위협들보다 적은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G7 등 현존하고 있는 기구들을 없애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을 개혁하고 강화 하자는 것이다.

### 조절의 확산

조절은 인간의 복지에 중요한 모든 분야들을 포괄해야 한다. 조절은 모든 부문을 포괄하면서도 부문들간에 서로 조율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경제적인 사항들, 특히 사회적 요소,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발전과정이며, 수많은 나라들에게 발전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는 규범을 필요로 한다. 이 규범은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권역별 및 일국별 경제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밀레니엄 라운드" 협상은 전세계적 조절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협상이 세계 인민들의 근본적인 이해를 존중할 것을 요구해야만 한다. 세계는 개방되어야 하지만, 세계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불평등이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사회권, 환경보호, 문화적 정체성이 전세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자간 투자협정(MAI) 협상이 결렬된 것도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우리는 국제 경제관계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조건의 담평을 저지해야 하며, 어린이 노동 및 강제노동의 폐지를 위하여 싸워야 한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사회권을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한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 단체들을 포괄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환경에 대한 배려는 우리의 정치적 행위 전체를 특징지어야 한다. "지속적 성

장"이라는 개념은 그로-할렌 브룬트란트 보고서와 더불어 처음으로 정치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리오와 교토에서 개최된 환경정상회담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책임들을 부과하였다. 그렇지만 취지와 행동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커서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 정책은 중장기적 시기를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기구의 계획적 실천을 전제로 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세계의 나머지 모든 행위자들이 자발적이고 연대적인 길에 동참하여 전세계적 규모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도전에 맞서도록 추동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립, 물, 쓰레기, 환무지화, 대기오염 등 민감한 영역에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술개발체제의 수립.

우리는 남북 사이의 연대를 추진하는 정책을 결연히옹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은 무엇보다도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무역의 발전이 제3세계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제3세계에 대한 공적인 지원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선진국들은 제3세계를 지원하는 노력을 결코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이 현존하는 연대장치, 특히로메 조약을 폐기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로메 조약은 오히려 개신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제부채의 감면 또는 탕감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 일을 더욱 전전시키고, 그 부담이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 전세계적 조절에 대한 권역 조직들의 기여

전지구적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주된 어려움은 그것이 일국적 현실과 너무 떨어져 있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매우 선별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지구적 정책은 권역 차원에서 보강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연합(EU)은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다른 대륙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맡고 나서야 한다. 각 대륙은 자신에게 알맞는 통합형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날 통합수준은 권역마다 다르고, 앞으로도 통합은 권역별로 고유한 리듬에 따라 진행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통합에 사회적 및 인간적 차원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자유무역지대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가 볼 때 유럽식 통합은 정치 및

경제 통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간주될 수 있다. 성과는 이미 손에 잡힐 정도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과거에 일국으로서 상실한 조절능력 중 일부를 다시 회복하였다. 그렇지만 유럽 통일화폐 유로(Euro)의 도입과 더불어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른 조율과정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조율이 “최고수준”으로 성공하고, 하나의 진보로 되기를 원한다. 경제부문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가 능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기구의 시장개입 장치들을 강화해야만 한다. 유로의 도입과 더불어 유럽 차원에서 새 발견된 주권은 바로 그 유럽 차원에서의 행위가능성의 재획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정치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 – 유럽연합 기구, 이것은 지리적 확장 이전에 실질적 행동력을 구비해야 한다. 유럽 중앙은행, 이것은 교조적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고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경제정부, 이것은 예산의 조절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 협정, 이것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사회협정, 여기에는 경제협정에 상응하는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유럽 사회주의자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막중하다. 우리의 성공은 다른 대륙들, 다른 국가들에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통합은 인본적 가치들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적 분유 모델

이 자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사회권을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한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을 응호하고 있으며, 균형잡힌 국제관계에 대한 희망을 전작시키고 있다.

## 민주주의, 끝까지!

사실상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주고, 경제와 기술을 사회적 및 정치적 차원과 결합시키주는 것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인 힘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공존공영하도록 조직할 필연성을 다른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더 분명하게 인식한 테에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의 세력분포와 이해충돌을 부정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가 서로 다른 사회계층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사회계층들은 변화를 겪기는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견고한 토대를 부여하는 "계급 타협"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동반사회"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이 목표는 본질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공동

체적 조직들에게는 대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약속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 즉 공동체적 자유와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사실로 존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요구들도 고려해야 한다. 세분화되고 문화적으로 다양해진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설계하기를 원한다. 혼히 사회연대 개념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들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회연대는 여전히 공동체를 추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민주주의의 재산이다. 그렇지 만 이제 개인은 공동체에 소속될 이유를 모를 경우 더 이상 공동체에 소속되려고 하지 않는다. 개인은 공동체적 행위가 자신에게 필수적이라고 보일 때에만 공동체적 행위에 참가한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새로운 관계양식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민주주의는 공동의 가치에 근거한 공동체적 기회이 개인 발전의 뿌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적 및 공동체적 기회들이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 다양한 기획들이 우리 사회의 삶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프랑스의 역사적 전통 속에 확립되어 있는 정교 분활 원칙과 같은 - 국가기구의 중립성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 민주주의, 진보의 유일한 길

정기적인 자유선거, 만인의 선거권, 정치적 다원주의, 현정체제에 근거한 안정과 법치 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결코 독재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독재가 “진보”를 표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민주주의 외에는 진보로 가는 길이 없다. 민주주의는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대륙 모든 국가에서, 관철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예외도 주저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유주의 체제가 정착되어 있는 곳에서는 부문별 민주주의가 진작되고 심화되어야 한다. 만인에게 정치적 삶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일은 차별과 불평등의 극복을 전제로 한다. 차별과 불평등은 수많은 국민들을 정치적 삶으로부터 배제시킨다. 특히 여성의 더 광범위한 참여를 쟁취하는 일, 남녀 평등 원칙을 실현하는 일은 우리의 한 가지 핵심적인 과제이다.

### 정치의 책임

민주주의의 실현은 기존의 제도들만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정치적 실천과 우리 자신의 당도 대상으로 한다. 우리 사회민주주의 당 구조는, 비록 19세기로부터 물려받은 자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직업화 과정”을 겪고 있다. 이 과정은 국민들 및 사회운동들로부터 당을 고립시킬 수 있다. 당의 구체적인 개혁 형식은 당연히 각국의 현실에 달려 있으며, 각국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책임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몇 가지 근본 원칙을 공유할 수 있다. 당을 좀더 개방적인 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더 잘 통제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위와 직무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최대다수의 당원들에게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엘리트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당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우리 사회민주주의 당은 현대적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식적 또는 절차적 문제들 이상의 것이다. 정치의 정당성은 실천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복지사회는 일체의 외국인 적대, 인종주의, 국수주의를 배제해야 하며, 이런 복지사회의 토대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필요로 한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새로운 관계양식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민주주의는 공동의 가치에 근거한 공동체적 기획이  
 개인 발전의 푸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사회민주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로운 개념이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권에 근거한 평등의지를 체현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단순한 자유방식, 저항, 또는 반항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정치 행위의 한가지 형식으로서, 수많은 정부들에게 세계를 달리 조직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의 매력 여하에 민주주의의 진로에 대한 논의의 미래가 달려 있다. 우리가 고수해야 할 근본원칙은 미래인식, 현대성, 그리고 연대이다. 진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인식이며, 추동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현

대성이다. 그리고 연대가 없이는 아무 것도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함께 어우러지고, 중재를 통하여 상호 만족을 얻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하나로 통합되고, 더 정의롭고 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권리를 통하여 조율된 세계 - 칼 렌너는 한 세기 반도 더 전에 이런 세계를 구상하였다. 그가 이 새로운 세계에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인터내셔널"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달려진 일은 바로 이 이상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다.(1999년 10월)◆